

이달의 초점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4개국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독일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권영지·주보혜 |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최경덕 |

스웨덴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신영규·남윤재 |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독일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¹⁾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ptions on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in Germany and Korea

권영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4년 독일인과 한국인 2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결혼 및 출산, 성역할, ②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③ 인구변화 및 사회구조, 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독일 대비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출산 의향과 희망하는 자녀 수는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낮았다. 한국인은 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독일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종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다. 독일인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보다 높았으며, 한국인은 전반적인 사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독일인보다 높았다. 독일과 한국의 인식 비교 결과는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출산을 감소 대응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고, 정책 방향 설정 시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가치관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에 따르면 2022년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여성 한국의 합계출산율²⁾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1) 이 글은 주보혜, 권영지, 김유휘, 박은정, 김은정. (202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1장 서론과 제4장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수정한 것이다.

2)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1인당 0.78명의 출산율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가족 조화의 어려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념의 변화, 노동시장 이중주의, 출산 전후 유급 휴가 활용에 대한 문화적인 어려움으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OECD, 2024). 이러한 분석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과 문화적인 환경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사적인 의사결정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정책적 수단은 이러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한적 수준에 머무른다. 따라서 한국의 출산이나 결혼 행동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배경과 함께 개인의 가치관, 신념, 개인적 경험 등 인식적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입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이나 결혼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이다. 이 글은 2024년 20~49세 독일과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독일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독일이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통독 직후 1990년대 초에는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

며, 1990년대 중반에는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자유로 인해 결혼, 출산 모두 연기 혹은 포기하면서(Schröder, 2013) 합계출산율이 1.24명(1994년)까지 감소하여 유럽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외교부, 2019).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을 점차 회복하여 합계출산율이 2010년 1.39명에서 2016년 1.59명까지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46명으로 OECD 평균인 1.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 회복의 배경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가족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 큰 변화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조사는 독일과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인식 비교를 통해 독일 대비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활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시행되었다. 두 국가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과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독일과 한국 결혼·출산·육아 인식 조사 특성

가. 조사 개요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독일과 한국 각각 20~4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조사 기간은 독일 2024년 7월 말~8월 초, 한국 2024년 6월이었다.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표본은 성, 연령, 지역별 비례 배분을 하였다.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부담, 인구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내용으로 한국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일어로 번역하고, 일반적 특성의 경우 독일의 환경에 맞도록 보기 문항을 수정하여 독일과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한국 인식 비교를 위해 동일한 내용,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 또는 인식 정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인식 비교와 인구 변화, 사회 구조,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로 나누어진다.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인식은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사 및 돌봄 인식, 인구변화, 사회구조, 정책에 대한 인식은 인구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 독일·한국 인식 비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결혼,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
		계획, 적정 자녀 수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
	가사 및 돌봄에 대한 인식	가사, 육아에 대한 적절, 실제 본인 부담률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어려움 정도 돌봄 주체에 관한 견해
인구변화, 사회구조,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인구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에 관한 전반적 인식
		사회구조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
		부모-현재-미래 세대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직장생활에서 정책 활용 가능 정도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3 <표 4-1-3> 일부 수정.

나. 조사 대상자 특성

행하였는데, 독일은 남성 51.2%, 여성 48.8%, 한국은 51.6%, 48.4%로 두 국가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독일은 20~24세 15.4%, 조사는 독일과 한국 각각 2500명을 대상으로 진

[표 2] 독일, 한국 조사 대상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독일		한국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성별	남성	51.2	1,280	51.6	1,291
	여성	48.8	1,220	48.4	1,209
연령	20~24세	15.4	385	9.4	236
	25~29세	15.5	387	20.3	508
	30~34세	16.2	406	16.1	403
	35~39세	19.6	491	16.0	401
	40~44세	18.6	464	22.8	570
	45~49세	14.7	367	15.3	382
지역	대도시	33.0	824	54.1	1,352
	대도시의 외곽·교외	-	-	10.2	255
	중소도시	48.2	1,205	29.9	748
	농어촌 지역	18.8	471	5.8	145
혼인 상태	미혼	27.4	684	41.1	1,027
	동거·사실혼	38.8	969	12.5	313
	법률혼	28.9	723	44.7	1,117
	이혼·별거·사별	5.0	124	1.7	43
자녀 여부	있음	48.2	1,205	36.3	907
	없음	51.8	1,295	63.7	1,593
자녀 수	1명	51.9	625	48.7	442
	2명	36.5	440	45.6	414
	3명	8.9	107	5.0	45
	4명 이상	2.7	33	0.7	6
취업 여부	취업	81.3	2,033	76.8	1,920
	미취업	18.7	467	23.2	580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	넉넉하게 생활	24.4	610	8.6	214
	부족하지 않게 생활	39.0	976	54.9	1,372
	생활하기 어려움	27.0	674	28.8	721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7.0	176	5.0	124
	모름	2.6	64	2.8	69
전체	100.0	2,500	100.0	2,500	

주: 1) 독일 지역 조사 문항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촌임. 한국과의 비교표 제시를 위하여 독일의 중도시, 소도시를 합쳐서 중소도시로 제시하였음. 독일 대도시는 한국 대도시, 독일 농촌은 한국 농어촌 지역 구분 항목에 제시함.

2) 자녀 수 응답 사례 수는 자녀 여부 '있음' 응답자만 해당함.

3) 취업 여부에서 취업은 '일하였음',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직'에 해당하는 응답값이며, 미취업은 '일거리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훈련', '구직활동', '구직활동하지 않음',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사회복무 또는 군복무', '가사, 육아 또는 가족돌봄'에 해당하는 응답값임.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5 <표 4-2-1> 일부 수정.

25~29세 15.5%, 30~34세 16.2%, 35~39세 19.6%, 40~44세 18.6%, 45~49세 14.7%로 35~44세 비율이 높았으나 대체로 응답자 연령 구간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한국은 20~24세 9.4%, 25~29세 20.3%, 30~34세 16.1%, 35~39세 16.0%, 40~44세 22.8%, 45~49세 15.3%로 20~24세 비율은 낮은 반면 25~29세와 40~44세 응답자 비율은 높았다. 지역의 경우 독일은 대도시 33.0%, 중소도시 48.2%, 농어촌 지역 18.8%로 중소도시 응답자 비율 높았으며, 한국은 대도시 54.1%, 중소도시 29.9%, 농어촌 지역 5.8%로 대도시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인 상태에서 미혼의 경우 독일 27.4%, 한국 41.1%로 한국의 미혼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동거·사실혼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한국은 법률혼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는 독일의 응답자 중 48.2%, 한국 응답자 중 36.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응답자의 자녀가 있는 비율이 조금 낮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2명 이하인 경우 독일 88.4%, 한국 94.3%였다. 3명 이상인 경우 독일 11.6%, 한국 5.7%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는 독일 81.3%, 한국 76.8%가 취업 상태라고 응답하여 독일 대비 한국의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과 관련해서는 '넉넉하게 생활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독일 24.4%, 한국 8.6%, '부족하지 않게 생활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독일 39.0%, 한국 54.9%로, 독일과 한국 각각

63.4%, 63.5%가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독일과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인식 비교

가. 결혼,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결혼,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결혼, 출산 의향과 계획, 적정 자녀 수,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일과 한국의 인식 비교를 하였다.

1) 결혼, 출산 의향과 계획, 적정 자녀 수

독일의 경우 결혼 의향에 대해 46.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52.9%가 있다고 응답하여 독일 대비 한국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독일 39.3%, 한국 47.0%로 결혼 의향이 있을 때 7.7%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동거·사실혼의 경우 독일 54.6%, 한국 76.0%로 21.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보다 한국에서 동거·사실혼인 경우 결혼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자녀 계획 의향에 대해 독일은 38.6%, 한국은 31.2%가 있다고 응답하여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가 7.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독일과 한국 모두 동거·사실혼인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

[표 3] 독일과 한국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향				계	사례 수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 못 함			
독일	미혼	39.3	25.1	19.6	15.9	100.0	684
	동거·사실혼	54.6	23.7	12.9	8.8	100.0	969
	이혼·별거·사별	22.6	45.2	13.7	18.5	100.0	124
	전체	46.5	25.8	15.5	12.2	100.0	1,777
한국	미혼	47.0	27.0	6.0	20.0	100.0	1,027
	동거·사실혼	76.0	10.9	3.2	9.9	100.0	313
	이혼·별거·사별	23.3	53.5	4.7	18.6	100.0	43
	전체	52.9	24.2	5.4	17.6	100.0	1,383

주: 결혼 의향은 미혼, 동거·사실혼,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88-189 <표 4-2-2> 재구성.

한 비율이 각각 45.8%, 52.4%로 가장 높았다.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와 걱정 자녀 수에 대한 응답에서는 독일 2.4명, 2.0명, 한국 1.7명, 1.6명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계획과 걱정 자녀 수가 2명 15.8%, 한국 22.6%로 나타났다.

[표 4] 독일과 한국의 출산 의향 및 계획, 걱정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출산 의향						자녀 수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 못 함	계	사례 수	계획		걱정		
							평균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독일	미혼	38.9	34.2	11.1	15.8	100.0	684	2.3	266	2.0	684
	동거·사실혼	45.8	32.3	9.5	12.4	100.0	969	2.3	444	2.0	969
	법률혼	31.7	50.8	6.6	10.9	100.0	723	2.5	229	2.1	723
	이혼·별거·사별	21.8	62.9	5.6	9.7	100.0	124	2.7	27	2.0	124
	전체	38.6	39.7	8.9	12.8	100.0	2,500	2.4	966	2.0	2,500
한국	미혼	35.6	33.9	7.9	22.6	100.0	1,027	1.8	366	1.4	1,027
	동거·사실혼	52.4	26.2	4.8	16.6	100.0	313	1.7	164	1.5	313
	법률혼	22.0	64.7	4.4	8.9	100.0	1,117	1.7	246	1.8	1,117
	이혼·별거·사별	9.3	67.4	7.0	16.3	100.0	43	1.3	4	1.5	43
	전체	31.2	47.3	5.9	15.6	100.0	2,500	1.7	780	1.6	2,500

주: 계획 자녀 수는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한 물음에 '낳을 생각이다'라고 답한 사람만 응답한 결과이며, 걱정 자녀 수는 전체 응답값임.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89-190 <표 4-2-3>, <표 4-2-4> 재구성.

정도이지만, 한국의 경우 계획과 적정 자녀 수 모두 2명 미만으로 나타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희망하는 자녀 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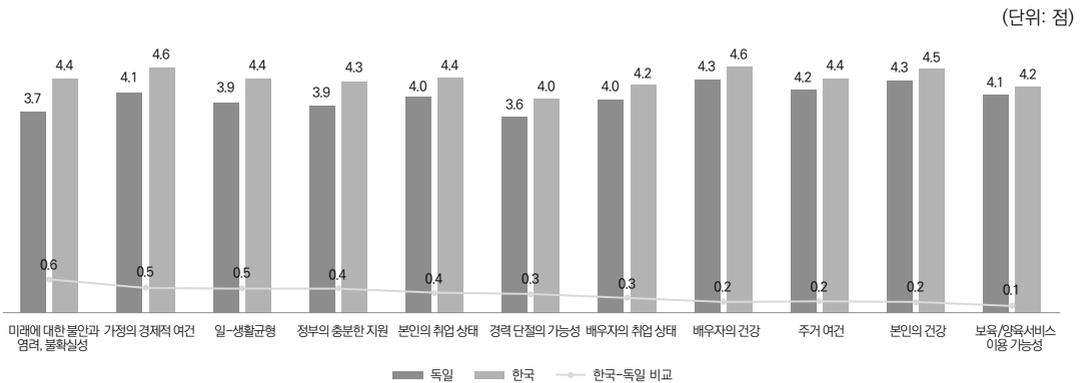
자녀 출산 계획 시 고려하는 요인 11가지에 대해 중요 인식 정도(5점)를 살펴본 결과 독일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주거 여건이 4.2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4.1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배우자의 건강이 4.6점, 본인의 건강이 4.5점, 본인의 취업 상태와 주거 여건이 4.4점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 모두 건강과 주거 여건,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었으나 독일에서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한국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중요 고려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으로 0.7점 차이를 보였다.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 인식 정도의 평균 점수가 독일보다 한국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자녀 출산 계획 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크게 작용하는 요인인 것을 보여 준다.

3)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

자녀 출산 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7가지로 제시하여 각 문항에 대해 동의 정도(5점)를 살펴본 결과 독일과 한국에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이었는데, 각각 4.1점, 4.5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이 3.9점, 4.2점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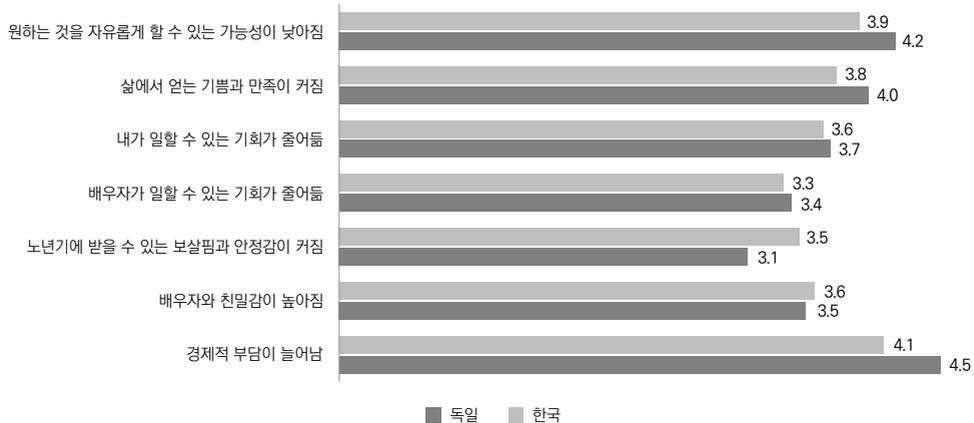
[그림 1] 독일과 한국의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주: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매우 중요하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95-200 <표 4-2-5> 재구성.

[그림 2] 독일과 한국의 자녀 출산 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03-205 (표 4-2-6) 재구성.

타나 한국과 독일 모두 자녀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이 나 삶의 자유로움이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짐’은 각각 3.8점, 4.0점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짐’은 독일 3.6점, 한국 3.5점으로 독일과 한국의 동의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4) 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

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해 남성 역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 여성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의 경우 독일과 한국 각각 남성의 역할 30.5%, 29.8%,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

57.8%, 67.6%, 여성의 역할 11.7%, 2.6%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았다. 특히 한국 여성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78.7%로 나타나 일에 대한 성역할 인식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의 경우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가 독일 4.6%, 한국 1.2%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독일 62.1%, 한국 76.1%로 나타났다. 가사에 대한 성역할에서는 독일에 비해 한국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의 경우 독일과 한국 각각 남성의 역할 3.5%, 1.2%, 여성의 역할 36.8%, 21.4%,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

[표 5] 독일과 한국의 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구분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			일상적 가사일			자녀 돌봄			계	사례 수
		남성	남성, 여성 모두	여성	남성	남성, 여성 모두	여성	남성	남성, 여성 모두	여성		
독일	남성	32.3	52.5	15.2	6.2	60.6	33.2	4.9	56.9	38.2	100.0	1,280
	여성	28.5	63.4	8.1	3.0	63.6	33.4	2.0	62.6	35.4	100.0	1,220
	전체	30.5	57.8	11.7	4.6	62.1	33.3	3.5	59.7	36.8	100.0	2,500
한국	남성	39.0	57.2	3.7	1.2	72.8	26.0	1.0	76.6	22.4	100.0	1,291
	여성	19.9	78.7	1.4	1.2	79.6	19.3	1.5	78.2	20.3	100.0	1,209
	전체	29.8	67.6	2.6	1.2	76.1	22.8	1.2	77.4	21.4	100.0	2,500

주: 1점(확실히 남성), 2점(대체로 남성)은 '남성', 3점(남성과 여성 모두)은 '남성, 여성 모두', 4점(대체로 여성), 5점(확실히 여성)은 '여성'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03-205 (표 4-2-6) 재구성.

59.7%, 77.4%로 일상적 가사일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나. 가사 및 돌봄에 대한 인식

1) 가사, 육아에 대한 본인 부담률과 일·가사 병행 어려움 정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적절·실제 부담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본인·파트너·배우자별 부담 점수 0점(0%)~10점(100%)에 대해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가사에 대한 실제 본인 부담률과 적절 본인 부담률에 대해 독일은 각각 58.6%, 54.6%, 한국은 55.0%, 51.6%로 적절 가사 부담률 대비 실제 가사 부담률이 독일과 한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 대비 한국의 적절 가사 본인 부담률과 실제 본인 부담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적절 가사 부담은 배우자·파트너의 몫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고, 실제로도 배우자·파트너의 부담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육아 부담의 경우 실제, 적절 본인 부담률이 각각 독일 57.4%, 55.3%, 한국 52.9%, 49.9%로 가사 부담과 마찬가지로 실제 본인 가사 부담률이 적절 부담률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 대비 한국의 본인 부담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 본인 부담률에 비해 육아 본인 부담률에서 독일·한국의 격차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적절한 육아 본인 부담률은 50% 이하였다. 배우자·파트너의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의 실제, 적절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육아 부담의 실제 본인 부담률이 72.3%로 취업자(48.0%)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사 병행 어려움의 정도를 1점(전혀 어렵지 않다)~5점(매우 어렵다)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독일 2.6점, 한국 3.5점으로 독일에 비해 한국이 일·가사 병행에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19년부터 부모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여 출산 후 1~5년 동안 유연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근로가 끝나도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형태로 복귀할 수 있다. 이 외에 2007년부터 독일 정부는 아동수당 외에 부모수당 제도를 법제화하여 출산 후 육아휴직자에게 12개월 까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부모 모두 총 40%가 이 제도

를 사용하고 있다(YTN, 2024). 한국의 육아휴직 이용 경험이 어머니 단독 사용 34.5%, 아버지 단독 사용 3.6%, 부모 모두 사용 6.1%인 실태(최효미 외, 2024)와 비교하였을 때 독일의 제도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12세가 되기 전 직장인 부모에게 질병 휴가를 주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이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돌봄 주체에 관한 견해

미취학아동 돌봄과 방과후 취학아동 돌봄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각 돌봄 내용에 대한 사회,

[표 6] 독일과 한국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본인 부담률과 일·가사 병행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가사 부담			육아 부담			일·가사 병행 어려움 정도		
	실제 부담률	적절 부담률	사례 수	실제 부담률	적절 부담률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독일	취업	57.0	53.5	1,435	55.0	54.1	712	2.6	1,435
	미취업	67.7	60.7	257	69.9	61.6	135	2.8	257
	전체	58.6	54.6	1,692	57.4	55.3	847	2.6	1,692
한국	취업	51.9	49.7	1,168	48.0	47.3	540	3.5	1,168
	미취업	68.7	60.4	262	72.3	60.5	136	3.6	262
	전체	55.0	51.6	1,430	52.9	49.9	676	3.5	1,430

주: 1) 가사 부담, 육아 부담과 일·가사 병행 어려움 정도는 동거, 사실혼, 법률혼 응답자만 해당하는 항목임. 육아 부담은 막내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만 응답한 값을 분석함.

2) 부담률은 본인-파트너-배우자별 부담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였으며, 본인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비율이 낮아질수록 파트너·배우자 부담률이 높아지고, 비율이 높아질수록 파트너·배우자의 부담률이 낮아짐을 의미함.

3) 일·가사 병행 어려움의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5점(매우 어렵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10~216 <표 4-2-8>, <표 4-2-9>, <표 4-2-10> 재구성.

[표 7] 독일과 한국의 미취학, 취학아동 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미취학아동 돌봄				방과후 취학아동 돌봄				
	사회	사회, 가족 모두	가족	사례 수	사회	사회, 가족 모두	가족	전체	
독일	6세 미만	17.4	46.9	35.7	706	11.0	35.8	53.1	706
	6~9세	10.6	50.0	39.4	404	7.4	42.8	49.8	406
	10대	11.8	51.0	37.1	735	8.6	40.1	51.3	735
	20대 이상	4.0	60.0	36.0	1,25	5.6	45.6	48.8	125
	전체	13.9	48.3	37.8	1,205	9.5	39.8	50.7	1,205
한국	6세 미만	3.5	70.0	26.5	343	15.2	67.3	17.5	343
	6~9세	4.5	65.3	30.3	337	16.3	67.7	16.0	337
	10대	5.8	67.2	27.0	670	20.9	62.1	17.0	670
	20대 이상	5.1	62.0	32.9	79	20.3	62.0	17.7	79
	전체	4.9	66.2	29.0	907	18.9	64.5	16.6	907

주: 사회의 역할은 '1점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2점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 가족 모두의 역할은 '3점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가족의 역할은 '4점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5점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응답값을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18-219 <표 4-2-11> 재구성.

사회와 가족 모두, 가족으로 나누어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미취학아동 돌봄의 경우 독일 13.9%, 한국 4.9%가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였으며, 독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가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취학아동 돌봄 주체 중 사회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는 독일 9.5%, 한국 18.9%로 독일보다 한국에서 사회의 역할로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독일은 자녀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독일·한국의 인구변화, 사회구조,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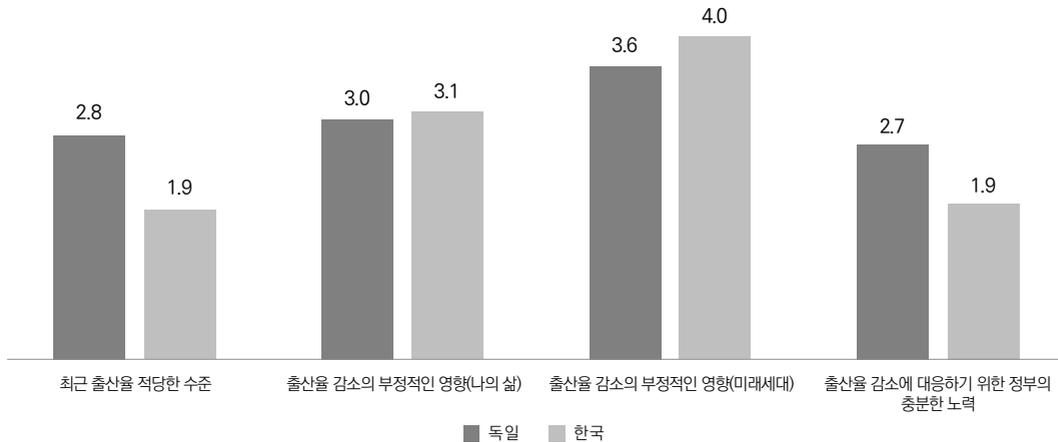
가. 인구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1) 인구에 관한 전반적 인식

최근 출산율 변화와 출산율 감소의 영향력, 출산율 감소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인구변화에 대한 내용 중 '최근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다'와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의 경우 독일은 각각 2.8점, 2.7점

[그림 3] 독일과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22-224 (표 4-2-12) 재구성.

으로 중간점인 3점에 근접해 있지만, 한국은 1.9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독일 대비 한국의 현재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1.9점)하고 있고,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3.1점)과 미래세대(4.0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1.9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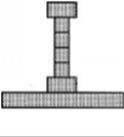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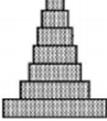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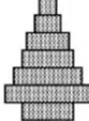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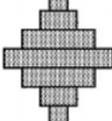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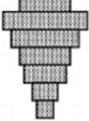
2) 사회구조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독일과 한국의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구조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후 독일과 한국 응답자가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구조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구조 유형

은 [그림 4]와 같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사회구조 유형은 유형 B(36.1%), 그다음은 유형 C(20.4%)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과 동일하게 유형 B(23.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유형 E(22.8%)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하위계층이 많은 사회구조를 보인다고 응답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유형 B와 유형 E의 차이가 0.4% 포인트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계층 혹은 상위계층에 사람이 많이 분포해 있으며, 상하 계층의 격차가 큰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 사회구조 유형

(단위: 점)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소수의 엘리트, 중간은 극소수, 하단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사회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 많은 사람들, 하단에 대다수의 사람이 있는 사회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 많은 사람, 유형 B와 다르게 하단의 사람이 소수인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회	상단의 엘리트가 많고, 하단으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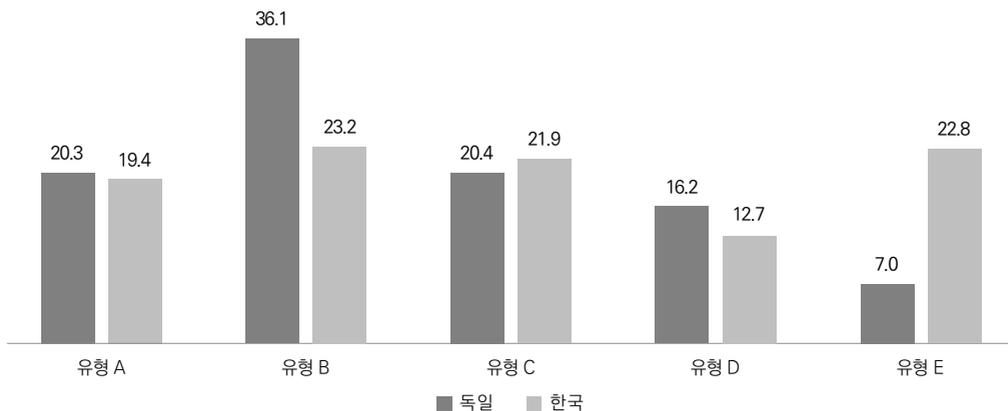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25 [그림 4-2-1] 참고.

공정한 사회, 소득 격차, 상위계층의 자산, 기후 변화의 위협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독일과 한국의 동의 정도(5점)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에 대해서는 독일 2.8점, 한국 2.4점으로 독일보다 한국의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에 대해서는 각각 독일 3.7점, 3.9점, 한국 4.0점, 4.2점으로 독일 대비 한국에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에 대해서는

[그림 5] 독일과 한국의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27-228 <표 4-2-13> 재구성.

[표 8] 독일과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사례 수
독일	2.8	3.7	3.9	3.7	2,500
한국	2.4	4.0	4.2	4.2	2,500

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30-232 <표 4-2-14> 재구성.

독일 3.7점, 한국 4.2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도 한국에서 독일보다 더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3)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

사회에서 개인 성공을 위한 요인의 중요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각 요인에 대한 응답값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유한 가정'과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가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중요 정도가 조금 높았다. 독일보다 한국이 더 가정 배경과 부모 요인이 사회에서 개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한국보다 중요 정도가 0.3점 높았다. 한국보다 독일이 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현재·미래 세대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독일과 한국의 부모세대 대비 현재세대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독일 3.4점, 한국 3.6점으로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부모세대보다 현재세대의 생

[표 9] 독일과 한국의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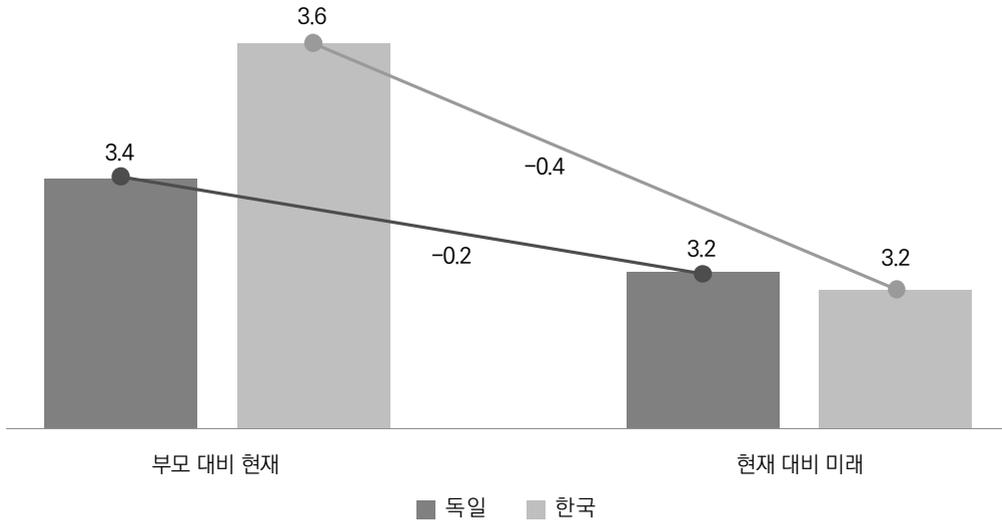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개인의 노력	정치적 인맥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사례 수
독일	3.8	3.7	4.1	3.2	3.0	3.1	2,500
한국	3.9	3.8	4.0	3.3	2.7	2.8	2,500

주: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필수적이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36-237 <표 4-2-15> 재구성.

[그림 6] 독일과 한국의 부모·현재·미래 세대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부모 대비 현재	현재 대비 미래	사례수
독일	3.4	3.2	2,500
한국	3.6	3.2	2,500

주: 1점(훨씬 나빠졌다), 2점(약간 나빠졌다), 3점(차이가 거의 없다), 4점(약간 좋아졌다), 5점(훨씬 좋아졌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수준의 변화가 긍정적임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0-243 <표 4-2-16>, <표 4-2-17> 재구성.

활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세대 대비 미래세대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부모·현재 세대 생활수준의 변화와 동일하게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독일 3.2점, 한국 3.2점으로 나타나 독일과 한국 모두 부모·현재 세대 생활수준의 변화보다는 현재·미래 세대 생활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 덜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은 부모세대 대비 현재세대와 현재세대 대비 미래세대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0.4점으로 독일에 비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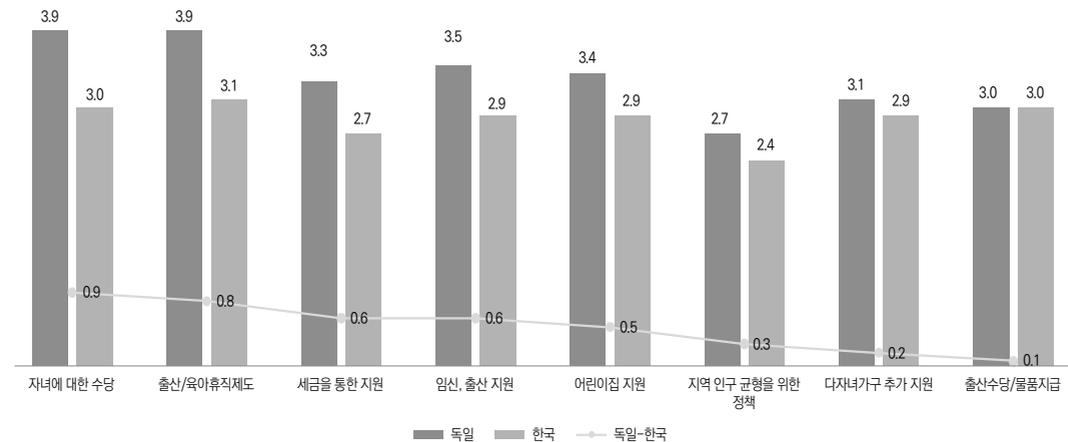
나.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1)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정책을 '임신, 출산 지원',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어린이집 지원', '자녀에 대한 수당', '세금을 통한 지원',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인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독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그림 7] 독일과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점)



주: 1점(전혀 모른다)~5점(매우 잘 안다) 응답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7-249 <표 4-2-1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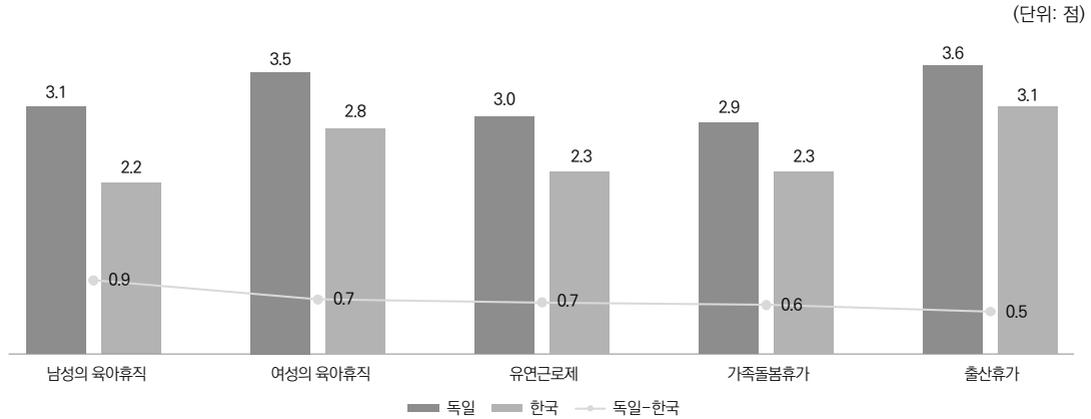
‘자녀에 대한 수당(3.9점)’과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3.9점)’였다. 그다음은 ‘임신, 출산 지원(3.5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출산/육아휴직제도(3.1점)’였다. 그다음은 ‘자녀에 대한 수당(3.0점)’, ‘출산수당/물품지급(3.0점)’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인지 정도 점수가 대체로 3점대인 반면 한국은 2점 후반대로 독일 대비 한국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독일 대비 한국 인구정책 인지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에 대한 수당이 0.9점 차이로 인지 정도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다음은 출산/육아휴직제도 0.8점, 세금을 통한 지원 0.6점으로 나타났다.

2) 직장생활에서의 정책 활용 가능 정도

독일과 한국의 직장생활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 가능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독일은 출산휴가 3.6점, 여성 육아휴직 3.5점, 남성 육아휴직 3.1점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출산휴가 3.1점, 여성 육아휴직 2.8점, 남성 육아휴직 2.2점으로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 정도가 독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독일과 0.9점, 0.7점 차이로 한국에 비해 독일에서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19년 부모의 유연근무제 제도화와 2007년 부모수당 제

[그림 8] 독일과 한국의 직장생활에서 정책 활용 가능 정도



주: 1) 1점(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5점(전혀 활용하지 못함) 응답값을 역코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을 의미함.

2) 분석 시 '⑥ 모르겠음' 응답자 제외함.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52-253 <표 4-2-19> 재구성.

도 법제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용 장려 정책으로 육아휴직률이 2008년 21.2%에서 2020년 43.7%로 상승하였다. 육아휴직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강민정, 2024). 반면 한국에서는 육아휴직 이용 경험이 어머니 단독 사용 34.5%, 아버지 단독 사용 3.6%, 부모 모두 사용 6.1%(최효미 외, 2024)에 그치고 있다. 인구정책을 보편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 혹은 금액과 관련된 방향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독일

[표 10] 독일과 한국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계	사례 수
독일	41.0	31.8	21.8	3.5	2.0	100.0	2,500
한국	51.7	27.6	15.3	3.2	2.2	100.0	2,500

출처: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55-256 <표 4-2-20> 재구성.

은 관련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한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다. 조금 증액 31.8%, 현재 수준으로 유지 21.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독일과 동일하게 관련 예산 대폭 증액 51.7%, 예산 조금 증액 27.6%, 현재 수준으로 유지 1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독일의 응답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관련 예산 대폭 증액과 관련된 응답이 10.7%포인트 차이로 한국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독일과 한국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과 한국의 인식 비교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출산 계획 자녀 수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평균 0.61명, 0.41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출산 계획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반면 한국에서는 1.74명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OECD에서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높으나 셋째 이상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제일 낮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다자녀 혜택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영유아보육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주거 지원 등 일부 지원 대상 범위를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법제처, 2025). 하지만 출산 계획 자녀 수에 대한 인식이 독일 대비 낮은 것으로 볼 때, 한국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율 감소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일·가사 병행의 어려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일·가사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0.90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기 근로단축,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업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고용노동부, 2025) 앞서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독일 대비 한국에서는 실제 정책 활용 가능 정도가 낮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정책적인 홍보와 함께 자유롭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중위계층이 많은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 16.2%, 한국 12.7%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 독일보다 상하계층 간 격차가 큰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문제에 대한 응답에서도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독일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격차가 크다는 부유한 1%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인식은 높아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낮고,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일·가사 병행의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과 한국 국민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사회의 공정성,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민정. (2024). 독일과 네덜란드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제93호**. <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1&idx=132486>
- 고용노동부. (2025).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250423091627d3a267164a1b425086447f6efbbe9598.pdf&rs=/viewer/BBS/2025/>
- 법제처. (2025).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다자녀가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
- 외교부. (2019). **OECD 주요국 출산율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https://overseas.mofa.go.kr/oeed-ko/brd/m_20807/view.do?seq=49
- 주보혜, 권영지, 김유취, 박은정, 김은정. (202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 김은설, 최윤경, 김동훈, 김지현, 김자연, 조혜주. (2024).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교육부, 유아정책연구소.
- 통계청. (2025). **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Country Notes: 대한민국*.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society-at-a-glance-2024-country-notes_fd5558c7-en/ce4577dd-ko.html
- OECD. (2024).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https://oecd.korea.org/kor/product/product_view.asp?BRDNUM=2068
- Schröder, K. (2013). Demografiepolitik als Gesellschaftspolitik der fairen Chancen. In Hüther, M., Naegele, G. (eds), *Demografiepolitik(pp.34~45)*. Springer VS. Wiesbaden. https://doi.org/10.1007/978-3-658-00779-9_2
- YTN. (2024). **“일·가정 양립이 중요”...독일의 출산·육아정책**.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25&key=202403231947042354>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ptions on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in Germany and Korea

Kwon, Youngji

Joo, Bohy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compares perceptions of Germans and Koreans regarding several themes—including ‘marriage, childbirth, and gender roles,’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care responsibilities,’ and ‘demographic shifts, social structure, and policies’—and draws implications for population policies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Survey of Perceptions o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conducted in 2024 of 2,500 individuals from each of five selected countries. Both the prevalence of fertility intentions and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were lower among Koreans than among Germans. Koreans also perceived greater difficulty balancing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such as housework and childcare. Germans were more aware than Koreans of available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rograms. Perceived levels of social trust and fairness were higher among Germans, while Koreans were more likely to agree on the need for improving social institutions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easures intended to respond to low birthrates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eir impact is felt more broadly by the public. Furthermore, institutional support is essential to help individuals make full use of programs aimed at promoting work–family balance. It is also crucial that, when charting policy directions, widely held public perceptions and social values be taken into account, as they may influence individuals’ decisions about family formation and childbirth.